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7. 11. 2.(목) 조간	배포	
담당부서	불법금융 대응단	김범수 팀장(3145-8521), 권순표 수석조사역(3145-8526)		
	경찰청 수사1과	박찬우 경정(3150-2168), 최진용 경감(3150-1777)		

제 목 :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경보 「경고」로 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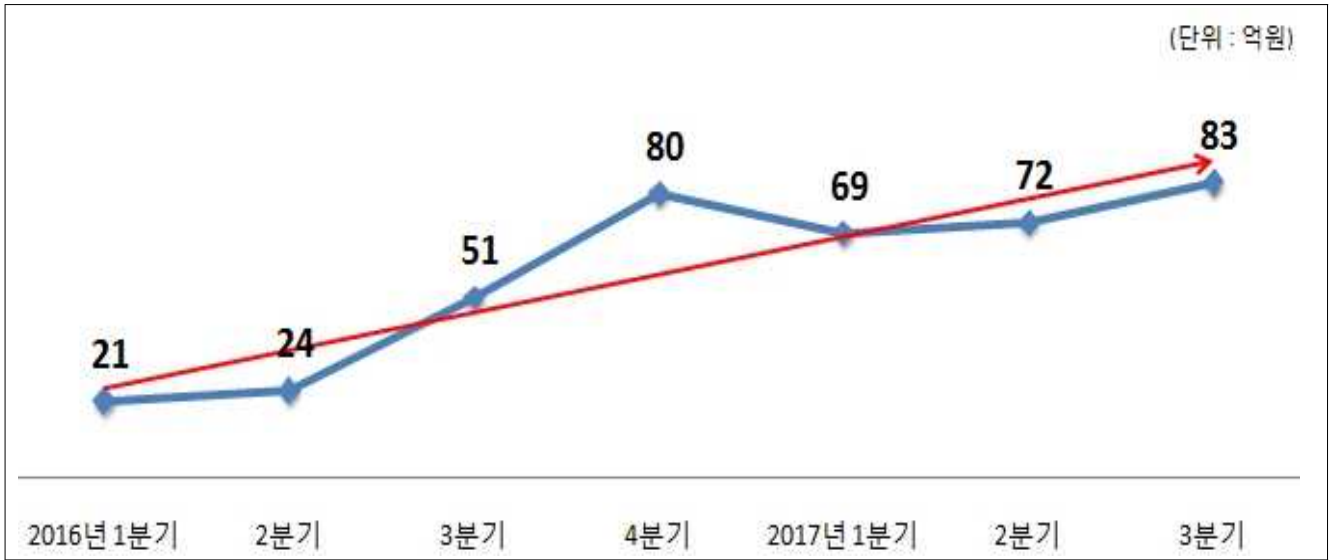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과제]

■ 소비자경보 2017-9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

1 소비자경보 격상 배경

-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이에 경찰청·금감원은 ‘17.4.6.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보도자료 참고
-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하고자 함
- 특히, 교사, 간호사 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 ‘17.9월 한 달간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피해자 중 피해금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38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7억 7천만원에 달함

<20~30대 여성의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금 추이>



참고1)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해당 계좌가 명의도용 혹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주겠다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

참고2)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이 표적이 되는 이유

-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아래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 또한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 아울러 스스로 전문직·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금감원이라며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3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

-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 일부 창구 직원은 여행 목적 등으로 달러 환전 요청시 자금사용 용도가 확인된다고 생각하여 문진을 실시하지 않음

-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달러)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 주므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기망하는 등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4 소비자 당부사항

-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

-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림

* 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금감원(☎1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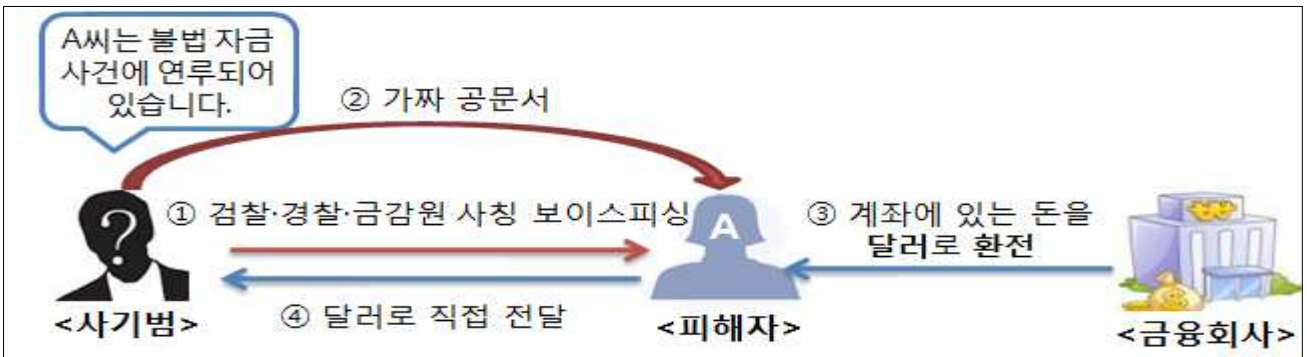
-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고

-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을 해야 함

5 향후 대응방안

- 금감원은 피해가 많은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제도를 집중 강화토록 하고
 - 특히 고액을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 등에도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 또한 20~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임
- 경찰청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신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 금감원,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은행 창구에서 범죄의심 거래 신고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임
- 아울러 양 기관은 최근 교사·간호사 등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여 피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사기범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씨(20대, 여)의 **개인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 “A씨 명의의 계좌가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오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면서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짜 검찰청 공문**을 휴대폰으로 보내 **사실임을 믿게**한 후,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속였음
- 이후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도 연루**되어 있으므로 **은행 직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 특히, 은행에서 **고객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신혼여행 목적**이라며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자
 - 피해자는 사기범의 지시대로 계좌에 있던 2,4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역 근처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을 만나 **\$20,000**을 전달하였으며
 - 이어서, 사기범이 금감원에서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금감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하자
 - 피해자는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음



※ 해당 통화내용은 실제 피해자와 사기범의 6시간가량 통화 중 일부 내용임
[👁️ 사기범 목소리 바로 듣기 \(클릭\)](#)

1. 불법 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교직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

▣ (사기범) 먼저 수사관을 통해서 부여받은 사건번호와 본인 성함을 육성으로 말씀하세요.
 ▣ (피해자) 사건번호 2017조사7403 김xx명의도용 안건이요. 김○○요
 ▣ (사기범) 피해자 입증을 받지 못하시면,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교직 공무원이시죠?** 김○○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장이 있는 여성분으로 저희가 파악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약식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혹여나 김○○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겠다하시면 거부 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는 원칙대로 구속 조사를 본인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본인 신상명부에 남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교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문제지 앞면에 보시면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 이 내용 아시죠?**
 피해자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공문내용,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문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주의사항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본인 육안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2. 금융회사 방문 전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당부

▣ (사기범) 이번 사건에 금융권 직원이 연루가 되어있는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금융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권 들어가시면 저희 수사기관과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은 금융권 직원이 속해있는 거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당들이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수사이기 때문에...
 ▣ (사기범) 그렇다고 해서 녹취가 진행 중인데 통화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금융권에 들어가시면 가방 속에 핸드폰을 넣어두시고,** 업무를 보시면 되는데,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권 밖으로 나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이 어떤 경우냐면 본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금융권 직원이 의심이 갈만한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면 계속해서 자리를 뜬다거나, 직원 옆 사람과 본인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건 특이사항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실 때 직원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으신 뒤에 직원에게 보여주고, 저희가 10~15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릴 거고, 그러면 통화버튼만 누르고 가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3.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피해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

▣ (사기범) 지금 금융감독원에 본인 출입허가증이 계속 기각이 된 상태라, 여의도 근처에서 대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가까운 CCTV 가장 많은 지하철역으로 가실 겁니다. 택시타시면 택시 기사분께 ○○역 ○번 출구로 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울 중앙지검 2017년 조사7403호 안건
 접수인 : ██████████
 접수일자 : 2017년 1월17일
 발행일련번호 : 서울 중앙지검 2017년 조사 7403호
 급수 : 특급
 부록 : 아래와같음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요지 : 단속접수자 ██████████(90██████-2██████) 조사7403특급 사건 김**등 국제금융사기 및 자금세탁,불법 명의도용 사건. 개인명의도용 침해신고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계좌양도 및 가해혐의거나 개인명의도용 피해자라는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해야함.

1. 행정법규절차14조2항에 근거하여 , 서울 중앙지검 수사과에서 행정집행사건을담당 , 단속접수자를 통보하여 반드시 본인의 계좌자금상증명.재산상황혹은 기타 필요한 진술을 우선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본사건은 2017년.금융집행 (100001호~100286호) 단속접수자관련돈세탁방지법사건 , 단속접수자는 요지에 기록된 시간에 모든재산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및 기타 소득) 및 재산상황을 합법적인 재산임을증명, 감독받아야함.

3. 금융법 39조3항에 따라 합법절차에 따라본인은 계좌추적조회를 통해서 금융실명제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명이 모든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 인적사항 자산이거나 모든부당한 거래내역을 조회를하여 투명성을 입증시켜야함.

4. 단속접수자는 집행명령이 발표된시간(여상)내에 , 만일 본사건의 조사,집행내용을 제삼자한테 전하였을경우(제삼자 포함), 본처및 관계기관(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법39조 17항 따라서 즉시 본인명의로된 재산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입금 및 기타 소득) 동결처리하는것입니다. 단속보호자는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울 지방 검찰청 청장 이영렬



기안자 *홍홍호* 과장 *김병현* 서울중앙지검장
유석연

주관기관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

- '17.9월중 경찰, 검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피해금이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여성 8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 86명 중 51명이 전화설문에 응함(응답률 59.3%)

전화설문 조사결과

설문항목	조사결과
1. 직업	① 일반 사무직 27명(52.9%) ② 교사, 간호사 등 전문직 11명(21.6%) ③ 주부 6명(11.8%) ④ 무직 4명(7.8%) ⑤ 자영업, 학생 3명(5.9%)
2.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했는지 여부(Y/N)	① Yes 51명(100%)
3. 피해금 인출·이체를 위해 예·적금 해지 여부(Y/N)	① Yes 23명(45.1%) ② No 25명(49.0%) ③ 무응답 3명(5.9%)

붙임 5

주요 검거 사례 [경찰청]

연번	사 건 개 요	비 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5. 25.경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예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조사해야한다'고 속이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 하여 믿게 하는 수법으로 ▶ 금감원 직원을 사칭, 20대 여성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4,300만원 상당 편취(4명 구속) <대구·북부> 	지능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5. 25.경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에 연루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에 맡기면 차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감원장 명의 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교부하여 믿게 하는 수법으로 20~30대 여성 피해자 9명으로부터 3억 6,000만원 상당 편취(1명 구속) <광주·지수대> 	지수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6. 7.경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명의 도용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속이고,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감원 명의 공문을 보여주며 20대 여성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 2,400만원 상당 편취(6명 구속) <서울·구로> 	지능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7. 25.경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가 되었는데,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는 달러로 환전을 하여 건네 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 여성 금감원 직원을 사칭,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며 20~30대 여성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5,800만원 상당(미화 2만7,000달러 포함) 편취(구속) <인천·연수> 	지능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9. 5. ~ 12. 6..경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금감원에 맡겨야 한다'고 속이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조회를 하여 믿게 하는 수법으로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20~30대 여성 피해자 50명으로부터 19억원 상당 편취(7명 구속) <대구·지수대> 	지수대